

<h1>보도자료</h1>	<div>  <h2>양형위원회</h2> </div>	
<p>2024. 12. 2.</p>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02-3480-1924)</p>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피해자와 양형』 개최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2024. 12. 2. (월) 14:0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제13차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및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12. 2. (월) 14:00~18:00
-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제1세션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내용

- 사회: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①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 요지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납부 관련 양형상 쟁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행사하여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

작하여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양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성격’, ② ‘양형에서의 피해자의 의사/피해회복의 의미’라는 두 가지 쟁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양형과 피해자의 의사 / 피해회복

-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특별예방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양형과 형벌목적을 고려할 때 양형에서 피해회복을 고려하는 것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 양형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행위자의 범행 이후의 태도는 양형책임의 판단대상인 불법의 결과요소와 행위요소를 사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경우에도 형벌완화의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음. 양형기준의 ‘실질적 내지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려는 노력으로 범행의 결과반가치가 상쇄될 수 있다면 ‘예시되지 아니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음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 납부의 양형상 고려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이유가 있어 보임. 구조대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측이 진실한 사과 또는 합의를 하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며, 피고인측이 먼저 변제하지 않고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행사한 구상권 청구에 따랐을 뿐이므로 자발성 또는 진지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음
- 합의 및 피해회복, 공탁에 관하여 최근 변경된 양형인자들은 피고인의 진지한

의사를 강조하고 있음.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국가에 구상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피해회복을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면 형의 감경이 가능할 것임. 피해회복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예시되지 않은 일반양형인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조금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임

② 유형용 판사(의정부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최근 '피해자의 용서'가 가지는 무게를 줄이고 있는 입법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합의를 '양형사유의 여왕'으로 취급하는 종래의 양형실무에도 다소간 변화가 필요함. 피해자의 심리적인 요소가 결여된 채 피해만 금전으로 변상되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민사와 형사가 미분화된 전근대적인 면모임
- 범죄피해자구조금과 유사한 사례로서 임금 등의 대지급금(채당금)을 예로 들 수 있음. 다만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어 범죄피해자구조금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실무례는 대지급금 지급만으로 결정적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드물고, 지급 자체만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거나 피고인의 구상의무 이행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상당수는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어 대체로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양형이유 기재 실무상 특정한 인자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정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였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그것으로 '큰 선처'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인식은 오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보임. 판단 유탈 차단의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③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일본 양형실무에서는 피해회복 등이 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그렇지 않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피해회복 등은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양형상 고려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도나 동기에 상관없이 피해회복의 객관적 사실이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하게 평가됨. 다만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는 문헌상 찾기 어려움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금 납부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에 일반 감경인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음에도 이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④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이 구상금까지 납부하였더라도 '구조금 지급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려움
- 합의, 공탁은 피고인이 야기한 불법을 '직접적으로' 상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은 피고인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특별예방의 관점에서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단계에서 피고인이 관여하는 바가 없고, 이후 피고인이 구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의 회복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2세션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김혜경 교수(양형위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① 조정민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발표 요지

- 형사공탁과 양형

- 형사공탁을 양형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공탁 관련 양형심리 절차를 합리화하고, ② 실체적 측면에서 그 결과물인 양형사실이 적절하게 양형에 반영되어야 함
-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안정적, 실효적 운용 및 그를 통한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형사공탁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현황

-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및 피해회복 도모, ② 피고인에 대한 공탁기회 부여를 위해 도입된 이후, 형사공탁의 이용건수가 폭증하였으나, 소위 기습공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음

○ 관련 양형인자로서 ‘피해회복’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정비된 체계, 피해회복의 정의규정, ‘공탁 포함’ 부분에 관한 최근의 수정 움직임 등에 의하면,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의 수령 및 수령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공탁 사실만으로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양형요소를 수정해 가고 있음

○ 형사공탁 특례에 관한 양형심리

- ① 절차적 측면
 -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어야 하고, 피고인이 조기에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까를 염려해 형사공탁 시점을 늦추기도 하므로,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위한 시한을 설정하는 등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형사공탁이 실시된 경우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공탁에 관한 객관적 상황의 확인, 실질적 내지 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심리의 대상이 됨
- ② 실체적 측면
 - 공탁금이 수령되거나 수령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피해자의 부정적 의견을 기재하고 양형에 참작하지 않되, 심리의 결과 참작할 사정들이 밝혀진다면 제한적으로 참작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제한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는 공탁 사실 및 액수,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해진 사정(신속한, 일회적 해결)뿐만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사건과 피해자에 대하여 보여온 태도, 변론에서 보여준 행태 등 제반 사정이라 할 것임

② 강윤진 판사(인천남부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미국과 영국의 양형기준은 피해자와 관련 양형요소인 공탁 여부나 피해변제 여부를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영미법에서 우리나라의 형사공탁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 노력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법원이 최종적인 선고형을 정하고 손해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함
- 가해자의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범행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상쇄하려는 노력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함. 피해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될 때에는, '피해자 측 의견의 확인 주체', '피해자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공탁의 양형 반영 여부', '공탁절차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와 관련된 사항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③ 김자은 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피고인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형사공탁을 하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 수령 여부를 충분히 숙고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서는 아니 됨.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위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피해자의 '의견 부지'가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거나, 심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지 아니하여야 함

4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지정토론 요지

- 현행 형사공탁특례규정(공탁법 제5조의2)은 절차적 측면에서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아닌 공탁자인 피고인 중심적인 규정임.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일 전까지 피고인이 공탁을 했는지를 검색해 보는 것이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임.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절차적 측면에서 통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형사공탁을 원칙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지,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형사공탁금액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 출급이나 회수동의에 대하여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